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우원식 “국민 60% 이상 동의” 야권 ‘토론 종결권’ 오늘 표결
尹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해야
대정부질문은 이틀째 파행 빚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질문은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

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을 밝히지 않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 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채상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 오늘 사퇴... 당 대표 연임 도전

“김준형 권한대행 체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7·20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4일 사퇴한다.

조 대표의 사퇴에 따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대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표직 사퇴를 하고 대표 권한대행에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



를 연다.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투표는 18일~20일 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 권위시 최고위원 다득표자가 대표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권은 5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주권당원들에게 부여된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공식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의회 의장선거, 민주당 신수정 단독 출마

제9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북구3·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민주당 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재선인 신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면, 1991년 7월 제1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한다.

부 의장 후보는 민주당 서용규 의원(비례), 민주당 채은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비례대표) 등 3명이 등록했다.

의장단 선거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후보들은 신청자에 한해 투표 전 정견 발표를 하고 이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의장을 먼저 선출한다.



이후 부의장 후보 3명 중 첫번째로 1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두 번째로 2부의장을 순차적으로 뽑는다.

전체 광주시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1명과 무소속 1명을 제외한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위원회 4개 상임위원장은 오는 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1일 개최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른다.

의회운영위원장은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선출함으로써 9대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무리한다.

정성현 기자

‘尹 탄핵청원 100만 돌파’... 민주 “심사 절차 실시”

여 “문재인 댄 140만이 탄핵청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00만 국민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

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민청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됐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심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면 역행만 하고 있고 언론 탄압, 방송 장악, 민주주의 후퇴, 계속되는 참사 등으로 2년간 국격 국민의 삶이 추락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죄를 단죄하고 나라 미래와 국민 삶 지키는 데 최선 다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1주기 되기 전 통

과시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라면서도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당무위, 지도부 선거 권리당원 투표 영향력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3일 8·18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의 표반영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심을 늘렸다.

정준호 “오물 풍선 항공피해 눈덩이, 정부대책 전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3일 “북한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회항, 북행, 체항, 이륙대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는 거의 무대책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예정된 안건은 특별한 이의 없이 다 통과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투표 반

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2일 사이 북한 오물 풍선의 남하에 따라 이륙 대기 18대, 북행(재차 상승해 착륙을 다시 하는 조작) 8대, 회항 5대, 체공(하늘에 머무는 것) 33대 등 항공기 64대가 비행의 차질을 빚었다. 화물기 피해는 총 8대, 피해를 본 탑승객 수는 9031명이다.

영 비율을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해 당무위 등으로 안건을 넘겼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적용한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의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은 20대 1 미만으로 확정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의원은 “정부는 대북 전달살포를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며 “일부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